

전세사기 피해 예방 맞춤형 교육 나서

전주시, 집다운 집 찾기 방법 · 분쟁 사례 소개로 이해 도와… 매월 1차례 주택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소도 운영

전주시가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나섰다. 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는 지난 22일 평화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청년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내 집 찾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7회째를 맞은 이날 교육은 평화사회복지관을 이용 중인 청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꾸준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집다운 집 찾기 △안심할 수 있는 집 찾기 △부담할 수 있는 집 찾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이날 교육은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사무처장 김



전주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22일 평화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청년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내 집 찾기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가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집주인과의 분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 참

석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수도권과 지방의 현장에서 전세사기와 강동전세 등 주

거 문제에 대응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거복지 종합 상담과 찾아가는 주민 교육,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함께 매월 1차례씩 운영하는 '주택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소'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05건의 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지역 법률가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무료 법률상담소에는 현재 이진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명)와 방소운 변호사(법률사무소 탄하)가 참여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063-281-0160)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노인복지과 직원 19명은 지난 21일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에 민생소비쿠폰 10% 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8만원을 전달했다.

민생소비쿠폰 나눔 릴레이 동참

전주시 노인복지과, 성금 108만원 기부

전주시 노인복지과 직원 19명은 지난 21일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회장 최재훈)에 민생소비쿠폰 10% 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8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된 금액은 전주시 7개 노인복지관에서 모금 접수된 기부금과 함께 전주시 7개 구·읍·면·동 주민자치회

와 누룽지, 식료품 등의 꾸러미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영양상담과 건강관리 정보 제공, 지역 복지지원 연계 등 사후 모니터링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 시와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는 지난달 28일부터 민생소비쿠폰 10% 나눔 프로젝트인 '함께미(米)소(笑)'를 추진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건물 내 통신 설비 체계적 관리 나선다

전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본격 시행

전주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 내 통신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와 같은 돌발 상황에서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 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제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

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 대상이며, 내년 7월 19일부터는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오는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다시 30일 이내에 전주시청 정보화정책과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보수 관리자는 건물의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20시간 이상의 '정보통신설

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기마다 한 차례 이상 설비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성능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2026년 1월 18일까지는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주시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대형 건축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2일 완판본문화관 세미나실에서 풍남동 주민들과 만나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풍남동서 시민과의 대화 이어가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역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 시장은 지난 22일 완판본문화관 세미나실에서 풍남동 주민들과 만나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소통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행사에 참여한 풍남동 통장과 주민자치협의회, 자생단체 회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준비된 변화! 함께 뛰는 전주'라는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원주·전주 통합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MIC복합단지 조성 △2025년 제1회 전주드론축구월드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풍남동 주민센터 신축 △전주한옥마을 우오수 분리사업 △한옥마을 경계 지역 주민 주차 지원 등 풍남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였다.

시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활용 기초학력 학습지원 추진

전주시는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사회보장기금을 활용한 '기초학력 학습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의 중학생 2~3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고 품행이 단정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말 1인당 20만 원의 기초학력 학습지원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준비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학업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덕진구, 체납관리 역량 강화 직무교육 실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중성)는 지난 22일 덕진구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둔화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결손 우려에 대응하고, 부서 간의 협업 강화로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질적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덕진구청뿐만 아니라 시청 세외수입 징수 담당 직원도

같이 참여해 체납처분의 세부 방법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와 대응 요령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특히 △독촉·체납처분(압류, 공매) 및 정리보류 개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록 등 전산시스템 활용 방법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체납 독려 및 분납 방법 등 세외수입 체납처분 관리에 초점을 뒀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